

울산광역시 중구 정책자문단 설치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383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: 2017. 9. 6.

제 출 자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1. 개정이유

정책자문단 활성화 및 구정 주요정책과 사업에 다양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정책자문단 구성 인원을 증원하고 분과위원회 명칭 등을 현행화하고자 「울산광역시 중구 정책자문단 설치·운영 조례」를 일부 개정코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제명 변경

- 울산광역시 중구 정책자문단 설치·운영 조례

→ 울산광역시 중구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

나. 자문단의 위원 구성 수를 18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증원(안 제3조제1항)

다. 분야예시 명칭 수정

- 행정, 복지 → 일반행정, 복지경제(안 제3조제3항)

라. 위원의 위촉 해제 조항 신설(안 제4조)

마. 분과위원회 명칭 수정 및 위원 수 조정

1) 주민생활지원 → 복지경제(안 제6조제1항)

2) 6명 이내 → 10명 이내(안 제6조제2항)

3. 근거법규

「지방자치법」 제116조의2

4. 개정조례안 및 신·구조문대비표: 따로 붙임

5. 참고사항

가. 예산조치 사항: 해당없음

나. 규제사무 심의: 해당없음

다. 성별영향분석 평가: 해당없음

라. 입법예고: 2017. 6. 26. ~ 7. 17.(의견없음)

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599호

울산광역시 중구 정책자문단 설치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울산광역시 중구 정책자문단 설치·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울산광역시 중구 정책자문단 설치·운영 조례”를 “울산광역시 중구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”로 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다음”을 “다음 각 호”로 한다.

제3조의 제목 “(구성)”을 “(자문단 구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18명”을 “30명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행정, 복지”를 “일반행정, 복지경제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(위원의 위촉 해제)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.

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4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

제5조의 제목 “(운영)”을 “(자문단의 운영)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주민생활지원”을 “복지경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6명”을 “10명”으로 한다.

제10조의 제목 “(운영규정)”을 “(운영세칙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 등에 관하여”를 “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자문단의 운영에”로, “협의를”을 “의결을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<u>울산광역시 중구 정책자문단 설치 · 운영 조례</u></p> <p>제2조(자문단의 기능) 울산광역시 중구 정책자문단(이하 “자문단”이라 한다)은 <u>다음</u>의 업무를 수행한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제3조(구성) ① 자문단은 <u>18명</u> 이내의 정책자문위원(이하 “위원”이라 한다)으로 구성하되,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위촉직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<u>행정, 복지, 건설도시</u> 등 분야별 전문인사를 구청장이 위촉하고, 당연직 위원은 울산광역시 중구 공무원(이하 “공무원”이라 한다)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.</p> <p>④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울산광역시 중구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</u></p> <p>제2조(자문단의 기능) ----- ----- ----- <u>다음 각 호</u>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조(자문단 구성) ① ----- <u>30명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<u>일반행정, 복지경제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<u>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</u></p>

현행	개정안
제4조(임기) <u>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임기 중이라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.</u>	제4조(위원의 위촉 해제) <u>구청장은 위원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.</u> 1. <u>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</u> 2. <u>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</u> 3. <u>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</u> 4. <u>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</u>
제5조(운영) ① ~ ③ (생략)	제5조(자문단의 운영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제6조(분과위원회의 설치) ① 분야별로 전문적인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단에 일반행정, <u>주민생활지원</u> , 건설도시 등 3개 분과위원회를 둔다.	제6조(분과위원회의 설치) ① ----- ----- ----- <u>복지경제</u> ----- -----.
② 분과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소관 국장이 되며,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<u>6명</u> 이내로 구성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<u>10명</u> -----.
③ (생략)	③ (현행과 같음)
제10조(운영규정)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<u>협의를 거쳐</u> 구청장이 정한다.	제10조(운영세칙) -- <u>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자문단의 운영에</u> ----- ----- <u>의결을</u> ----- -----.

근거법규

「지방자치법」

제116조의2(자문기관의 설치 등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·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의안 번호	1383	[울산광역시 중구 정책자문단 설치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] 심 사 보 고 서
----------	------	--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7. 9. 6.(수)
- 나. 제출자 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7. 9. 8.(금)
- 라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7. 9. 19.(화)

2. 제안설명 요지(기획예산실장 김혜경)

가. 제안이유

정책자문단 활성화 및 구정 주요정책과 사업에 다양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정책자문단 구성 인원을 증원하고 분과위원회 명칭 등을 현행화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1) 제명 변경 : 「울산광역시 중구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」
- 2) 구성인원 증원
 - 정책자문단 : 18명 이내 ⇒ 30명 이내(안 제3조제1항)
 - 분과위원회 : 6명 이내 ⇒ 10명 이내(안 제6조제2항)
- 3) 자문단 등 명칭 변경
 - 행정, 복지 ⇒ 일반행정, 복지경제(안 제3조제3항)
 - 주민생활지원 ⇒ 복지경제(안 제6조제1항)
- 4) 위원의 위촉 해제 조문 정비(안 제4조)
- 5)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

다. 근거법규 : 「지방자치법」 제116조의2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최영환)

- 본 개정 조례안은 구정의 주요정책 입안 및 각종 사업에 대한 관련 분야 전문가의 다양하고 폭넓은 자문을 통해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 인원을 증원하고,
-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